

농·수협 임원도 '돈 선거' 판친다

순천지청, 여천농협 이사선거 후보 2명 등 33명 기소

해남 옥천농협 이사선거 돈받은 선거인단 30명 자수

농·수협 임원·조합장 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고질적인 '돈 선거' 풍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선되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역대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지역 유지라는 감투까지 겸할 수 있는 '이권' 때문에 돈을 주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매수에 나섰다. 구속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창)은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선거에 출마,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이모(76)·김모(71)씨 등 후보 2명과 후보의 부인, 대의원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선거에서 친동생과 공모, 대의원 23명에게 총 73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김씨는 대의원 총 5명에게 3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보 2명은 25명의 대의원에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


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는 전체 81명의 대의원 가운데 29명이 이상 후보로 나섰고 이중 13명이 선출됐다.

검찰은 비상임 이사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100명 내외의 대의원만 포섭하면 당선 가능, 금권선거 관행이 잔존해 있다면서 제공자와 수수자 간 토착적 유대관계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해남경찰도 25일 옥천농협 이사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사 선거인단 30명은 이날 후보자 5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0만~50만 원을 받았으며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이들은 전날 금품 살포설이 나돌자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경찰도 앞서 강진수협 대의원 A씨가 임원 선거 과정에서 경합 지역 후보로 나온 4명 중 3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다른 후보 1명으로부터 80만 원 등 모두 380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 돈뿌리는 농·수협이사 선거 왜?



- 1 막강한 권한 사업승인·자산취득·예산집행 의결권
- 2 과도한 특혜 회의 참가비 쓸쓸하고 연수·견학 많아
- 3 낫진 문턱 집행부 추대→대의원경력 누구나 가능
- 4 돈선거 유혹 선관위 선거관리 안 해 감시의 눈 없어 일부 대의원만 포섭하면 당선
- 5 끝없는 비리 부도덕·합량미달 인사들 각종 비리 연루

- 여수 여천농협 2명 구속·31명 불구속
- 해남 옥천농협 선거인단 30명 자수
- 강진수협 380만원 신고 수사 착수

신고해움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농·수협 이사는 무보수직이지만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인지도도 높이는 중간 단계인면서 이사회 구성원들끼리 일이라 '배신자는 매장'이라는 사회 풍토도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토론했다.

리 대상도 아닌 탓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강진경찰 지능팀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수협 임원선거의 경우, 합계 일을 하고 얼굴을 맞대는 토착민들끼리 일이라 '배신자는 매장'이라는 사회 풍토도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토론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

폐지 줍는 노인들에 밥그릇 빼앗는 사회

'고물상' 주거·상업지서 외곽지역 이동해야

임절래(가명·여·80)씨 부부는 전남대 후문 일대를 돌며 폐지를 모아서 파는 일을 한다. 하루 두 차례씩 폐지 수집에 나선 지도 20년이 넘었다. 앞으로 임씨 부부처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삶이 훨씬 더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재활용수집소, 이른바 '고물상'은 '잡종지'로 옮겨야 한다. 지역별 잡종지 주소는 주거지나 상업지 등 특별히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도심이 아닌, 외곽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폐지를 모아 리어 카에 싣고 끄는 노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는 고물 수집가들의 경우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들 뿐 아니라 실직 등으로 폐지 수집에 가세한 40~50대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5만 명이 '고물' 수집으로 생

계를 유지한다는 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광주협의회 주장이다. 폐기물관리법은 또 특별시·광역시 내 규모 1000㎡가 넘는 고물상의 경우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보관시설을 비롯, 선별·분리·압축과 같은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광주협의회측은 광주지역 고물상 450곳 중 대부분이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실정으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해 당장 폐업하겠다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개정 법률에 따라 광주에서 재활용 시설을 갖춰 신고해야 하는 대상 고물상도 133곳에 달하지만 현재 신고한 고물상은 고작 25곳에 불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속 여부는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해안초소 총기사고 1명 숨져

25일 오후 5시 50분께 장흥군 회진면 31사단 소속 모 부대 정남진 해안초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김모(21) 일병이 숨졌다.

김 일병은 이날 선임 부대원과 함께 해안 경계 근무를 서던 중이었다. 김 일병은 사고 당시 머리 부분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부대 측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미 숨져 있었다. 육군 31사단은 현장에 헌병대를 급파해 실탄 지급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혼하지”는 부인 렌터카에 감금

○...이혼하지는 부인을 납치한 뒤 이를 동안 감제로 납치, 감금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서 행.

○...2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29)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10분께 순천시 서면 A아파트에서 아내 김모(여·25)씨를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감제로 태우고 경남 하동,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감금했다는 것.

○...경찰에서 남편 김씨는 결혼 3개월 된 신혼인데 최근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이혼을 앞두고 “부인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후회. /순천=김은중기자 ejkim@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2명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해)로 기소된 윤모(48)·나모(4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저적 정당성을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실제 당원들의 의사와 다르게 대리투표를 하지 않았고 통합진보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합진보당이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갖추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며 “범행의 책임을 윤씨 등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북구 우산동에 '사랑의 밥차' 광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25일 광주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 저소득 주민 3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IBK 기업은행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9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주1회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스캔' 공문서 위조죄 적용될까

광주지검 '문서 위조' 수사

실무자 2명 소환조사 마쳐

광주시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이 위조 원인과 과정, 관련자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 하루만인 지난 24일 검찰은 실무자인 한모(여·44)씨 등 핵심당사자 2명을 전격 소환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쳤다. 위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 등의 진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주범을 거치면서 한씨 등의 진술과 입수한 자료를 교차 분석한 뒤 추가 조사 대상 및 사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서가 왜 위조 작성되고

누가 사전·도중·사후에 지시·관여·묵인했는지 살펴봐야 하며, 이는 수사팀에서 그때 그때 판단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대상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범리 적용도 고민하고 있다. '공문서 위조'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공문서 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한씨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만큼 공문서 위조에 가깝지만 총리와 장관 사인을 스캔해 정부 보증서에 가필하는 등 전자서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종이문서의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연산 참옷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옷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옷음식 토종 참옷닭 / 옷 청둥오리 / 옷 삼계탕

한방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촌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옷닭 (오분, 식사 소포함) **40,000원**

촌담백숙 **38,000원**

옷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괴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옷닭 062)515-5757(옷칠옷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천초교 후문 건너편

건물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 143평, 건물 480평, 2012년도 신축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100평)
- ▶ 감정가/시세 - 24억원
- ▶ 임대 - 보3억원에 월1,600만원 (임대 중)
- ▶ 대출 - 14억원(이자 월560만원)
- ▶ 매매가 - 24억원
- ▶ 수입 - 7억원 투자에 월 1,040만원
- ▶ 주인 직매함, 010-3605-5000